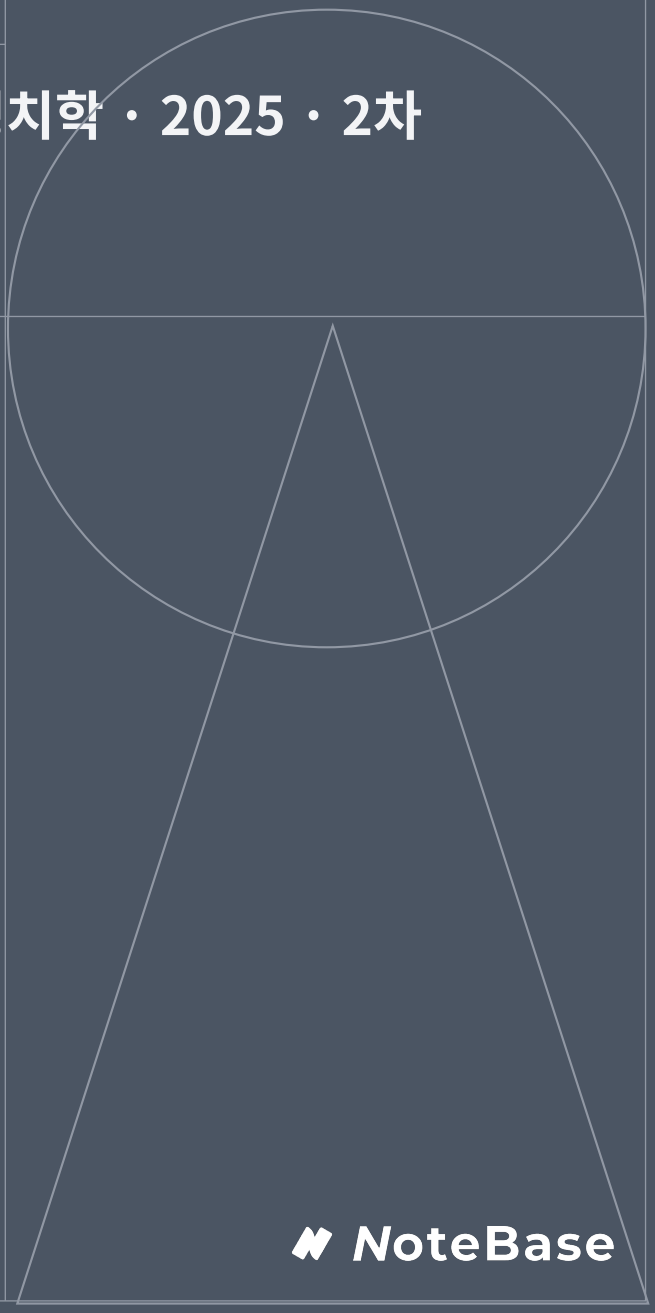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국제정치학 · 2025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국제정치학 · 2025 · 2차

공무원/국가직/7급 · 국제정치학 · 2025 · 2차

문 1.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국제연맹은 회원국의 (가)을 존중하고 보존하는 데 동의하였다. 그래서 회원국의 동의가 없이는 어떤 의무도 부여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한 회원국에 대한 침입에 대해 다른 모든 회원국이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고 필요시 군사력을 동원하여 대응한다는 (나)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① (가): 정치적 독립, (나): 자조

② (가): 세력균형, (나): 자조

③ (가): 정치적 독립, (나): 집단안보

④ (가): 세력균형, (나): 집단안보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제연맹의 기본 원리인 정치적 독립 존중과 집단안보의 의미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정치적 독립은 각 국가가 외부의 강제 없이 자국의 정치 질서와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상태이다. 국제연맹은 회원국의 주권과 정치적 독립을 존중하므로 회원국 동의 없이 새로운 의무를 강제로 부과하기 어렵다.
집단안보는 한 국가에 대한 침략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공동 제재와 필요시 무력까지 동원해 대응하는 원리이다.
자조는 국제정치의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집단안보처럼 보편적 공동대응 체제를 뜻하지는 않는다.
세력균형은 특정 국가나 동맹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힘의 균형을 맞추는 원리이다. 회원국의 정치적 독립 존중 자체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의 '회원국의 동의 없이는 어떤 의무도 부여할 수 없다'는 부분은 회원국의 주권과 정치적 독립을 존중한다는 취지와 맞는다. 그러나 (나)의 '침입국에 대해 다른 모든 회원국이 경제 제재와 필요시 군사력까지 동원해 대응한다'는 내용은 자조가 아니라 집단안보이다. 틀린 표현은 '(나)=자조'이다. 올바르게는 '(나)=집단안보'이다.
② X: 세력균형은 강대국 간 힘의 배분을 조정해 패권을 막는 원리이므로 (가)의 설명과 맞지 않는다. (가)는 힘의 균형이 아니라 회원국의 정치적 독립 존중을 말한다. 또한 (나)도 자조가 아니라 집단안보이다. 틀린 표현은 '(가)=세력균형, (나)=자조'이다. 올바르게는 '(가)=정치적 독립, (나)=집단안보'이다.
③ O: (가)는 회원국의 정치적 독립을 존중한다는 설명과 맞고, (나)는 침략국에 대해 전체 회원국이 공동 대응한다는 집단안보의 설명과 맞는다.
④ X: (나)는 집단안보와 맞지만, (가)를 세력균형으로 본 점이 틀리다. 국제연맹이 회원국 동의 없는 의무 부과를 부정하는 이유는 세력균형 때문이 아니라 회원국의 정치적 독립과 주권을 존중하는 원리 때문이다. 틀린 표현은 '(가)=세력균형'이다. 올바르게는 '(가)=정치적 독립'이다.

오답 포인트

자조와 집단안보를 혼동하기 쉽다. 자조는 각국이 자기 힘으로 안보를 확보하는 방식이고, 집단안보는 침략을 공동의 문제로 보고 회원국 전체가 함께 제재하는 방식이다. 또한 세력균형은 힘의 분포 문제이고 정치적 독립은 주권 존중 문제이므로 차이축이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에서 '회원국의 주권·동의·독립 존중'이 나오면 정치적 독립을, '침략국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공동 제재'가 나오면 집단안보를 먼저 떠올리면 된다. '각국이 스스로 안전을 책임진다'는 표현이 있을 때에만 자조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정치적 독립은 주권 존중, 집단안보는 공동 제재, 자조는 각자 생존, 세력균형은 힘의 균형이다.

NoteBase

문 2. 미어샤이머(J. Mearsheimer)의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제도나 규범은 강대국들의 권력 경쟁을 완화한다.

② 국제체제에서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패권을 추구한다.

③ 국가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권력의 극대화가 아니라 협력의 극대화이다.

④ 강대국 간의 전쟁은 지도자의 비합리적인 판단이나 국내 정치의 왜곡 때문에 발생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가 국가의 생존, 권력 극대화, 패권 추구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는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는 타국의 의도를 확실히 알 수 없으므로 생존을 위해 상대적 힘을 최대한 키우려 한다고 본다. 따라서 강대국은 현상 유지보다 힘의 우위를 추구하며, 가능하면 패권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움직인다고 설명한다. 국제제도나 규범은 이러한 경쟁을 근본적으로 제어하기보다 강대국 권력정치의 반영물에 가깝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① X. 공격적 현실주의는 국제제도나 규범이 강대국의 권력 경쟁을 완화한다고 보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권력 경쟁을 완화한다"이다. 올바르게는 국제제도나 규범은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힘의 분포를 반영할 뿐 권력 경쟁을 근본적으로 억제하지 못한다.
② O. 공격적 현실주의에서 국가는 무정부 국제체제에서 생존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 큰 힘과 패권적 지위를 추구한다. 선지의 "생존을 위해 패권을 추구한다"는 진술은 이 이론의 핵심과 부합한다.
③ X. 공격적 현실주의에서 국가의 궁극적 관심사는 협력의 극대화가 아니라 권력의 극대화이다. 틀린 표현은 "협력의 극대화"이다. 올바르게는 국가는 생존을 위해 상대적 권력을 극대화하며, 가능하면 패권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한다.
④ X. 공격적 현실주의는 강대국 간 전쟁의 주된 원인을 지도자의 비합리성이나 국내 정치의 왜곡에서 찾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지도자의 비합리적인 판단이나 국내 정치의 왜곡 때문에"이다. 올바르게는 무정부적 국제체제, 상대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 생존 압박이 강대국 경쟁과 전쟁 가능성을 낳는다고 본다.

오답 포인트

①은 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의 설명을 공격적 현실주의에 끼워 넣은 함정이다. ③은 현실주의 이론인데도 "협력의 극대화"라는 협력 중심 표현을 넣어 헷갈리게 만든 선지이다. ④는 전쟁 원인을 지도자 성향이나 국내 정치로 돌리는 설명을 섞어 구조적 현실주의와 구분하지 못하면 틀리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미어샤이머가 보이면 먼저 무정부 상태, 생존, 상대적 권력, 패권 추구를 연결하면 된다. 제도와 규범의 완화 기능, 협력의 극대화, 지도자 심리나 국내 정치 중심 설명이 나오면 공격적 현실주의와 거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미어샤이머 = 무정부 체제에서 생존을 위해 권력과 패권을 최대화하는 공격적 현실주의이다.

NoteBase

문 3. 현실주의가 바라보는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기구를 통해 국가 간의 안보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다.

② 국제기구는 패권국이나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③ 국제기구는 한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영구적 기능과 지위를 가진다.

④ 국제기구를 통해 국가들은 배신이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현실주의가 국제기구를 자율적 협력 장치로 보는지, 아니면 강대국의 힘과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도구로 보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현실주의는 국제정치를 무정부 상태에서의 권력 경쟁으로 보고 국제기구도 국가, 특히 강대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제한적 장치로 본다.
자유주의 제도주의는 국제기구가 정보 제공, 거래비용 감소, 규범 형성 등을 통해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제기구의 독자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면 자유주의에 가깝고, 국제기구의 종속성과 강대국 편향을 강조하면 현실주의에 가깝다.

선지별 해설

① X. 현실주의는 국제기구를 통해 국가 간의 안보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무정부 상태와 상대적 이득 경쟁이 계속되므로 국제기구만으로 안보딜레마가 해소되기 어렵다. 틀린 표현은 "안보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다"이다. 올바르게는 "국제기구만으로 안보딜레마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어렵다"이다.
② O. 현실주의는 국제기구가 중립적 행위자라기보다 패권국이나 강대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장치로 본다. 국제기구의 규칙과 운영도 힘의 분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옳다.
③ X. 현실주의는 국제기구에 영구적 기능과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국제기구의 역할은 힘의 구조와 강대국의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지된다. 틀린 표현은 "영구적 기능과 지위를 가진다"이다. 올바르게는 "국제기구의 기능과 지위는 힘의 분포와 국가 이해관계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지된다"이다.
④ X. 배신이나 무임승차 문제를 국제기구가 해결할 수 있다는 평가는 자유주의 제도주의에 가깝다. 현실주의는 국가들이 상대방의 의도와 상대적 이득을 의심하므로 이런 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고 본다. 틀린 표현은 "배신이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이다. 올바르게는 "국제기구가 있어도 배신과 무임승차 문제는 지속적으로 남을 수 있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과 ④는 국제기구의 협력 촉진 기능을 앞세운다는 점에서 그럴듯하지만, 이는 현실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 제도주의의 설명이다. ③은 국제기구를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행위자로 과장한 표현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기구를 보고 강대국의 힘, 상대적 이득, 안보 경쟁을 강조하면 현실주의로 판단한다. 반대로 정보 제공, 협력 증진, 배신 감소, 무임승차 완화 같은 기능을 강조하면 자유주의 제도주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현실주의는 국제기구를 힘의 그림자로 보고, 자유주의는 협력의 도구로 본다.

NoteBase

문 4. 유엔(United Natio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5개국이다.

②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의 주요한 사법기관이다.

③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임기는 5년이다.

④ 유엔 총회의 각 구성원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엔의 주요 기관별 구성, 기능, 임기, 표결 원칙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1차적 책임을 지는 기관이며,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국은 상임이사국과 달리 임기가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은 2년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 법적 분쟁을 재판하는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이다. 유엔 총회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대표기관이며 각 회원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5개국이므로 옳다.
② O: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 헌장 제92조에 명시된 6개 주요 기관 가운데 하나로, 사법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사법기관이다. 국가 간 분쟁의 재판과 권고적 의견 제시가 핵심 기능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비상임이사국의 임기는 5년'이라는 표현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임기는 2년이다. 5년은 상임이사국 수와도 맞지 않고 비상임이사국 임기와도 맞지 않는다.
④ O: 유엔 총회는 주권평등 원칙에 따라 각 구성원이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회원국 규모와 관계없이 1국 1표가 원칙이다.

오답 포인트

안전보장이사회 문제에서는 상임이사국의 수 5와 비상임이사국의 임기 2년을 뒤섞는 함정이 자주 나온다. ③은 '안보리'라는 큰 틀은 맞지만 숫자 하나를 바꾸어 오답을 만든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엔 기관 문제는 기관별로 기능, 구성 숫자, 임기, 표결 원칙을 따로 끊어서 확인하면 정리가 쉽다. 안보리는 상임 5개국과 비상임 10개국, 비상임 임기 2년, 총회는 1국 1표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안보리 상임 5, 비상임 임기 2년, 총회는 1국 1표이다.

NoteBase

문 5.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현실주의는 국가 간 상호의존의 심화가 평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② 신자유주의는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을 부정하며 국가 간의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

③ 신자유주의는 국가 간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국제협정을 무의미하다고 본다.

④ 신현실주의는 국제체제를 무정부 상태로 보고 국가의 생존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주장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국가 간 협력과 국가 목표를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신현실주의는 국제체제의 무정부성과 세력 분포가 국가 행동을 규정한다고 보는 이론이며, 국가는 생존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상대적 이익에 민감하다.
신자유주의는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을 인정하면서도 국제제도, 상호의존, 반복적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론이며, 절대적 이익과 협력의 지속 가능성에 주목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국가 간 상호의존의 심화가 협력과 평화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는 쪽은 신자유주의에 가깝다. 틀린 부분은 '신현실주의'이다. 올바르게는 '신자유주의는 상호의존과 제도를 통해 협력과 평화의 가능성을 본다'이다.
② X: 신자유주의도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틀린 부분은 '무정부성을 부정하며'이다. 올바르게는 '신자유주의는 무정부성을 인정하지만 그 안에서도 국가 간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이다.
③ X: 신자유주의는 국가 간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으며, 국제협정과 국제제도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 틀린 부분은 '협력이 불가능하다'와 '국제협정을 무의미하다고 본다'이다. 올바르게는 '신자유주의는 협력이 가능하며 국제협정과 국제제도가 그 협력을 뒷받침한다고 본다'이다.
④ O: 신현실주의는 국제체제를 무정부 상태로 보고, 국가가 자조 환경에서 생존을 최우선 목표로 추구한다고 본다. 안보와 생존을 중심에 두는 설명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두 이론 모두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을 인정한다는 점을 놓치면 ②에 흔들리기 쉽다. 또한 상호의존, 제도, 협력 가능성은 신자유주의의 키워드인데 이를 신현실주의에 붙이면 ①처럼 틀리게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무정부, 자조, 생존, 안보, 상대적 이익이 나오면 신현실주의로 판단한다. 제도, 상호의존, 협력 가능성, 절대적 이익이 나오면 신자유주의로 판단한다. 두 이론 모두 무정부성을 인정하지만 협력의 범위와 의미를 다르게 본다.

암기 포인트

신현실주의는 무정부·생존·안보이고, 신자유주의는 무정부 인정·제도·협력이다.

NoteBase

문 6. 1900년부터 1920년 사이에 일어난 다음 사건을 시기가 이른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오스트리아-헝가리의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합병
(나) 이탈리아의 오스트리아-헝가리에 대한 선전 포고
(다) 제1차 발칸 전쟁 발발
(라) 독일의 벨기에 침공

① (가) → (다) → (라) → (나)
② (나) → (다) → (가) → (라)
③ (라) → (다) → (나) → (가)
④ (라) → (나) → (가) → (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1900년부터 1920년 사이 유럽 국제정치 주요 사건의 선후관계를 묻는 순서형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가) 오스트리아-헝가리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합병 - 1908년 보스니아 위기를 일으킨 사건이다.
2. (다) 제1차 발칸 전쟁 발발 - 1912년에 발발하여 발칸 질서를 흔든 사건이다.
3. (라) 독일의 벨기에 침공 - 1914년 8월 독일이 슐리펜 계획에 따라 벨기에를 침공한 사건이다.
4. (나) 이탈리아의 오스트리아-헝가리에 대한 선전 포고 - 1915년 5월 이탈리아가 협상국 편에서 참전한 사건이다.

왜 이 순서: 1908년의 보스니아 합병이 가장 이르고, 1912년 제1차 발칸 전쟁이 그 뒤를 잇고, 1914년 독일의 벨기에 침공 뒤에 1915년 이탈리아의 대오스트리아 선전 포고가 이어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가) 1908년 → (다) 1912년 → (라) 1914년 → (나) 1915년의 순서가 정확하다.
② X: 틀린 부분은 (나)를 맨 앞에 둔 점과 (가)를 뒤로 미룬 점이다. 이탈리아의 오스트리아-헝가리 선전 포고는 1915년 사건이므로 1912년 발칸 전쟁이나 1908년 보스니아 합병보다 앞설 수 없다. 올바르게는 (가) → (다) → (라) → (나)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라)를 (다)보다 앞에 두고, 가장 이른 사건인 (가)를 맨 뒤에 둔 점이다. 독일의 벨기에 침공은 1914년이므로 1912년 제1차 발칸 전쟁보다 늦고, 보스니아 합병은 1908년이므로 가장 먼저 와야 한다. 올바르게는 (가) → (다) → (라) → (나)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라)와 (나)를 (가)보다 앞에 둔 점이다. 독일의 벨기에 침공은 1914년, 이탈리아의 선전 포고는 1915년이므로 1908년 보스니아 합병보다 앞설 수 없다. 올바르게는 (가) → (다) → (라) → (나)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사건과 발칸 위기 사건이 한 묶음으로 제시되어 연도를 대충 기억하면 (라)나 (나)를 앞세우기 쉽다. 특히 이탈리아의 참전 시점을 제1차 세계대전 개전과 같은 1914년으로 착각하면 ②나 ④에 흔들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순서형 국제정치 문제는 사건명을 보면 먼저 연도를 붙여 본다. 발칸 위기 1908년, 제1차 발칸 전쟁 1912년, 독일의 벨기에 침공 1914년, 이탈리아의 대오스트리아 선전 포고 1915년처럼 연도축을 세우면 선지 판단이 바로 된다.

암기 포인트

보스니아 1908 → 발칸전 1912 → 벨기에 1914 → 이탈리아 1915의 흐름이다.

NoteBase

문 7. 유럽통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로마조약(Treaty of Rome)을 통해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창설되었다.

② 마스트리히트조약(Maastricht Treaty)을 통해 유럽연합(EU)이 출범하였다.

③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를 통해 유럽 단일 시장을 형성하기로 합의하였다.

④ 파리조약(Treaty of Paris)을 통해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등 8개 국가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출범시켰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럽통합 과정의 주요 조약과 그 조약이 만든 공동체·연합의 대응 관계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파리조약은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창설한 조약이다. 로마조약은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를 창설한 조약이다. 단일유럽의정서는 단일시장 완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합의이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은 유럽연합(EU)을 출범시킨 조약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로마조약은 1957년 체결되어 유럽경제공동체(EEC)와 함께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를 창설하였다. 선지는 EEC 창설만 언급하나 이는 로마조약의 효과 중 하나로 옳은 진술이다.
② O: 마스트리히트조약은 유럽공동체를 넘어 유럽연합을 공식 출범시킨 조약이다. 따라서 마스트리히트조약과 EU를 연결한 진술은 옳다.
③ O: 단일유럽의정서는 1986년 서명되어 1987년 발효되었으며, 1992년까지 유럽 단일시장을 완성하기로 목표를 설정하여 통합을 심화한 합의이다. 따라서 유럽 단일시장 형성 합의와 연결한 진술은 옳다.
④ X: 틀린 부분은 '8개 국가'이다. 파리조약으로 ECSC를 출범시킨 국가는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6개국이다. 올바르게는 '파리조약을 통해 6개 국가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출범시켰다'이다.

오답 포인트

유럽통합사는 조약 이름과 창설 기구가 연속해서 나오므로 로마조약과 파리조약, EEC와 ECSC를 서로 바꿔 기억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④의 기구 이름보다 참가국 수를 틀리게 제시한 점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럽통합 문제는 조약명을 보면 먼저 무엇을 만들었는지와 몇 개국이 출발했는지를 연결해 판단한다. 파리조약은 ECSC 6개국, 로마조약은 EEC, 마스트리히트조약은 EU라는 순서로 대입하면 빠르게 걸러진다.

암기 포인트

파리-ECSC-6개국, 로마-EEC, 마스트리히트-EU로 묶어 기억하면 된다.

NoteBase

문 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2009년에 진행된 이 당사국 총회에서는 지구의 기온 상승 폭을 평균 섭씨 2도로 제한하기 위해 참가국들이 특별한 감축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과정을 수립했으며,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 등을 돕기 위해 추가적인 재원 마련을 약속하였다. 구체적으로, 2010 ~ 2012년 기간에 300억 달러,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를 확보하는 목표에 합의하였다.

① 더반 회의
② 베를린 회의
③ 마라케쉬 회의
④ 코펜하겐 회의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별 핵심 합의 내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베를린 회의는 1995년 COP1로서 선진국의 추가 감축의무 협상을 시작한 베를린 위임이 핵심이다.
마라케쉬 회의는 2001년 COP7로서 교토의정서 이행규칙을 구체화한 마라케쉬 합의가 핵심이다.
코펜하겐 회의는 2009년 COP15로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와 2010~2012년 300억 달러, 2020년까지 연 1,000억 달러의 기후재원 약속이 핵심이다.
더반 회의는 2011년 COP17로서 2020년 이후 적용될 새로운 기후체제 협상을 시작한 더반 플랫폼이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더반 회의는 2011년에 열린 COP17이다. 제시문의 2009년, 2도 목표, 2010~2012년 300억 달러, 2020년까지 연 1,000억 달러 약속은 더반이 아니라 코펜하겐 회의의 내용이다. 더반 회의의 대표 성과는 2020년 이후 적용될 새로운 기후체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더반 플랫폼(Durban Platform) 합의이다.
② X: 베를린 회의는 1995년 COP1이다. 틀린 부분은 2009년 재원조달 합의와 2도 목표를 베를린 회의에 연결한 점이다. 베를린 회의의 대표 성과는 선진국의 추가 감축의무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베를린 위임(Berlin Mandate)이며, 이는 이후 교토의정서로 이어졌다.
③ X: 마라케쉬 회의는 2001년 COP7이다. 틀린 부분은 코펜하겐 합의를 마라케쉬 회의의 성과처럼 본 점이다. 마라케쉬 회의의 대표 성과는 청정개발체제·배출권거래 등 교토의정서의 세부 이행규칙을 확정한 마라케쉬 합의(Marrakesh Accords)이다.
④ O: 코펜하겐 회의는 2009년 COP15이며,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확인하고 개도국 지원을 위한 단기재원 300억 달러와 2020년까지 연 1,000억 달러 조성 목표를 제시하였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당사국총회는 회의명이 도시명으로 제시되어 연도와 핵심성과가 뒤섞이면 쉽게 혼동된다. 특히 더반 회의도 향후 체제 수립과 연결되어 기후협상 전환점처럼 보이지만, 2도 목표와 300억 달러·1,000억 달러 재원 약속은 코펜하겐 회의를 식별하는 단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에 2009년, 2도 목표, 2010~2012년 300억 달러, 2020년까지 연 1,000억 달러가 함께 나오면 코펜하겐 회의부터 떠올리면 된다. 연도와 대표 성과를 한 묶음으로 연결하면 다른 회의명 선택지를 빠르게 지울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코펜하겐은 2009년 COP15, 2도 목표, 300억 달러와 1,000억 달러 재원 약속이다.

NoteBase

문 9. 구성주의(Constructiv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체제의 의미와 맥락은 간주관적(intersubjective)이다.

② 국제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관념(idea)을 강조한다.

③ 국가의 정체성(identity)이 타 국가와의 관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④ 실증주의(positivism) 국제정치이론 전통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을 중시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구성주의가 국제정치를 물질적 힘만이 아니라 규범, 관념,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으로 본다는 점과 합리적 선택 중심의 합리주의 전통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구성주의는 국제정치의 현실이 행위자들 사이에 공유되는 규범, 관념, 정체성 같은 간주관적 의미를 통해 구성된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의 이익과 선호는 처음부터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구성주의는 국제체제의 의미와 맥락이 행위자들이 공유하는 규범과 인식 속에서 형성된다고 본다. 국제체제는 단순한 물질 배치가 아니라 간주관적 의미 구조라는 설명이므로 옳다.
② O: 구성주의는 국제정치 현상을 설명할 때 관념, 규범, 담론 같은 비물질적 요소를 중시한다. 관념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구성주의의 핵심 특징에 해당하므로 옳다.
③ O: 구성주의에서는 국가의 정체성이 타 국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할 수 있다고 본다. 관계의 변화가 정체성과 이익의 재구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옳다.
④ X: 틀린 부분은 '실증주의 국제정치이론 전통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을 중시한다'는 표현이다. 합리적 선택은 주로 현실주의나 자유주의 같은 합리주의 전통의 설명 방식이다. 구성주의는 행위자의 선호를 고정된 것으로 전제하기보다 규범과 정체성이 선호와 이익 자체를 구성한다고 본다. 올바르게는 '구성주의는 간주관성, 규범, 정체성, 관념을 중시하며 국가의 이익과 행동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본다'이다.

오답 포인트

구성주의도 이론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선택 모형과 쉽게 묶어 버리면 ④에 끌리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이론'이라는 공통점이 아니라 '무엇이 국가행동을 만든다고 보는가'의 차이를 묻는 데 있다. 구성주의는 고정된 선호를 가진 합리적 행위자보다 정체성과 규범의 형성을 더 중시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규범, 관념, 정체성, 간주관성, 사회적 구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구성주의에 가깝다. 반대로 고정된 선호, 효용 극대화, 합리적 선택이 중심이면 합리주의 전통의 설명인지 먼저 의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구성주의는 힘 그 자체보다 의미와 정체성을 본다.

NoteBase

문 10.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② 도일(M. Doyle)과 마오즈(Z. Maoz)는 민주평화론을 주장했다.

③ 민주평화론의 제도적 모델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쟁의 결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다.

④ 민주평화론의 규범적 모델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는 의사 결정 과정으로 인해 비민주주의 국가보다 전쟁 준비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민주평화론의 핵심 명제와 제도적 모델, 규범적 모델의 설명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민주평화론은 민주국가 상호 간에는 전쟁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는 주장이다. 제도적 모델은 선거, 여론, 권력분립 같은 제도적 제약 때문에 전쟁 결정과 수행의 비용이 커진다고 본다. 규범적 모델은 민주국가가 상호 관계에서 타협, 협상, 평화적 분쟁 해결의 규범을 적용한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1번: O. 민주평화론의 대표 명제는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전쟁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 이론은 민주국가 간 전쟁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완전한 불전쟁이 아니라 전쟁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양자적 명제를 말하지만, 선지는 이 핵심 취지를 단순화해 표현한 것으로 시험에서는 옳은 설명으로 처리한다.
2번: O. 마이클 도일과 지브 마오즈는 민주평화론을 대표적으로 논의한 학자들이다. 민주주의와 평화의 상관관계를 이론화하고 경험적으로 뒷받침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옳다.
3번: O. 제도적 모델은 민주국가에서 전쟁 결정이 지도자 개인의 즉흥적 판단으로 끝나지 않고 여론, 의회, 선거 책임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따라서 국민의 의견이 전쟁 결정에 반영된다는 설명은 맞다.
4번: X. 틀린 부분은 "규범적 모델"이다. 의사결정 절차가 복잡하고 전쟁 준비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설명은 규범적 모델이 아니라 제도적 모델의 설명이다. 규범적 모델은 민주국가가 서로를 상대로 타협과 평화적 해결 규범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제도적 모델과 규범적 모델을 바꾸어 놓는 것이 대표 함정이다. 여론, 의회, 책임성, 시간 지연처럼 절차와 비용을 말하면 제도적 모델이고, 타협, 협상, 평화적 분쟁 해결을 말하면 규범적 모델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제도, 절차, 견제, 여론, 전쟁 비용이 나오면 제도적 모델로 판단한다. 선지에 상호 존중, 타협, 협상, 비폭력 규범이 나오면 규범적 모델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제도적 모델은 절차와 비용의 제약, 규범적 모델은 타협과 평화 규범으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11. 러셋(B. Russett)과 오닐(J. Oneal)이 제시한 평화의 삼각구도를 이루는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제기구
② 민주주의
③ 양자 외교
④ 경제적 상호의존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리셋과 오닐이 제시한 평화의 삼각구도, 즉 칸트적 평화의 세 축을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리셋과 오닐은 평화의 삼각구도를 민주주의, 경제적 상호의존, 국제기구의 세 요소로 설명한다. 이 세 요소는 국가 간 협력 유인을 높이고 전쟁 비용을 키워 무력충돌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국제기구는 평화의 삼각구도의 한 축이다. 국제기구와 제도는 국가 간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을 조정해 분쟁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② O: 민주주의는 한 축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제도적 제약과 규범 공유 때문에 상호 간 무력충돌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본다.
③ X: 양자 외교는 평화의 삼각구도의 구성 요소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양자 외교'이며, 올바르게는 '국제기구'이다. 이 이론은 일반적 외교기법이 아니라 민주주의, 경제적 상호의존, 국제기구라는 세 구조적 요인을 묶어 설명한다.
④ O: 경제적 상호의존은 한 축이다. 교역과 투자로 상호 이익이 커질수록 전쟁의 비용이 커져 분쟁 억제 효과가 생긴다고 본다.

오답 포인트

③의 '양자 외교'는 평화와 관련된 말이라 그럴듯하지만, 평화의 삼각구도는 외교 일반론이 아니라 특정한 세 변수의 조합을 묻는 이론이다. 따라서 평화와 가까운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르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리셋·오닐 문제가 나오면 민주주의, 경제적 상호의존, 국제기구의 3개 묶음을 먼저 떠올린다. 외교 일반, 세력균형, 동맹 같은 주변 개념이 보이면 평화의 삼각구도 자체의 구성 요소인지부터 구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칸트적 평화 3축은 민주주의, 경제적 상호의존, 국제기구이다.

NoteBase

문 12. 아세안(ASEA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세안경제공동체(AEC)는 회원국 간 관세를 철폐하고 재정 정책을 통합하였다.

②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회원으로 하고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③ 정치적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무력 사용 금지와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④ 1984년 브루나이, 1995년 베트남, 1997년 미얀마와 라오스, 1999년 캄보디아가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ASEAN의 기본 성격과 원칙, 그리고 ASEAN 경제공동체(AEC)의 통합 수준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ASEAN은 동남아 국가들이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사회 협력을 위해 만든 지역 협력체이다.
AEC는 ASEAN 내부의 시장 통합과 생산기지 형성을 추진하는 경제공동체 구상으로, EU식 재정통합이나 단일통화 체제와는 다르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재정 정책을 통합하였다'이다. AEC는 역내 시장 통합, 상품·서비스·투자 이동의 자유화, 생산기지 연계를 추진하지만 회원국의 재정정책까지 하나로 통합한 체제는 아니다. 올바르게는 'AEC는 역내 경제통합을 심화하였지만 공동 재정정책을 운영하지는 않는다'이다.
2번: O. ASEAN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회원으로 두고 지역 안보의 안정, 분쟁 완화, 경제 협력을 핵심 목표로 한다.
3번: O. ASEAN은 정치적 안정을 위해 무력 사용 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내정 불간섭 원칙을 중시해 왔다. 이는 이른바 ASEAN 방식의 핵심 내용이다.
4번: O. 브루나이는 1984년, 베트남은 1995년, 미얀마와 라오스는 1997년, 캄보디아는 1999년에 가입하였다.

오답 포인트

ASEAN과 AEC를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통합체로 착각하면 1번에 끌리기 쉽다. 이 문항은 경제협력의 심화와 재정주권의 통합을 일부러 섞어 놓은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역기구 문제는 회원국 확대 연혁, 운영 원칙, 통합 수준을 분리해서 본다. 경제공동체가 나오면 단일시장 추진인지, 관세동맹인지, 단일통화·재정통합까지 가는지의 수준을 따로 확인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ASEAN은 비간섭과 합의의 협력체이고, AEC는 시장 통합 추진체이지 재정통합체는 아니다.

NoteBase

문 13.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한국은 2009년에 선진공여국 모임인 (가) 가입이 확정되었고, 그 규정을 준수하며 국제사회에서 (나)에게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하고 있다.

① (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나): 수원국
② (가): 세계은행(World Bank), (나): 최빈국
③ (가): 유엔개발계획(UNDP), (나): 투자국
④ (가): G20, (나): 개발도상국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성격과 공적개발원조의 대상인 수원국 개념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DAC는 OECD 안에서 공적개발원조 기준을 논의하는 선진공여국 협의체이다.
수원국은 공적개발원조를 받는 나라를 뜻하는 원조 관계상의 개념이다.
세계은행은 개발금융을 담당하는 국제금융기구이고, UNDP는 유엔 개발 협력기구이며, G20은 주요 20개국 협의체이다.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은 경제발전 수준에 따른 분류일 뿐, 이 문장에서 요구하는 원조 대상의 정확한 용어는 수원국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한국은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이 확정되었다. DAC는 선진공여국들의 원조 기준과 정책을 조정하는 협의체이고, 공적개발원조의 상대방은 수원국이므로 연결이 정확하다.
② X: 틀린 표현은 '(가) 세계은행'과 '(나) 최빈국'이다. 세계은행은 선진공여국 모임이 아니라 개발금융 국제기구이다. 또한 ODA의 일반적인 대상 표현은 최빈국이 아니라 수원국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가) 유엔개발계획(UNDP)'과 '(나) 투자국'이다. UNDP는 개발원조를 집행·지원하는 유엔 기구이지 DAC와 같은 공여국 협의체가 아니다. 투자국은 공적개발원조의 대상 개념이 아니며, 올바르게는 수원국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가) G20'과 '(나) 개발도상국'이다. G20은 세계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이지 선진공여국 모임이 아니다. 개발도상국은 넓은 경제 분류 개념이므로 이 문장의 정확한 원조 대상 용어로는 수원국이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최빈국, 개발도상국, 수원국을 같은 뜻처럼 섞으면 틀리기 쉽다.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은 발전 수준 분류이고, 수원국은 원조를 받는 지위를 가리키는 개념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원조 관련 문항에서는 먼저 '(가)가 공여국 협의체인지, 개발기구인지, 경제협의체인지'를 구분하고, '(나)는 발전 수준 분류인지 원조 관계 개념인지'를 나누어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DAC는 공여국 협의체, ODA의 상대는 수원국이라는 연결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4.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고, 보호, 통합의 책임으로 구분될 수 있다.

②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를 통해 채택된 후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재확인되었다.

③ 보호책임의 원칙에 따라 국제연합은 필요할 때 국가의 내정에 무력을 사용하여 간섭할 수 있다.

④ 보호책임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제노사이드, 전쟁범죄, 인종청소,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서 국민을 보호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보호책임의 핵심 구성과 적용 범위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보호책임(R2P)은 한 국가가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도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1차 책임을 지고, 국가가 실패할 때 국제사회가 지원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원칙이다.
핵심 구별은 임의적 인도주의 개입이 아니라 유엔 체제 안에서의 단계적 보호책임이라는 점이다.
대표적인 정리는 국가의 1차 보호책임, 국제사회의 지원책임, 국제사회의 적시적 대응책임이라는 세 기둥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경고, 보호, 통합의 책임"이라는 분류이다. 보호책임의 분류는 두 갈래로 정리된다. 첫째, 2001년 ICISS 보고서의 초기 정식화는 예방책임, 대응책임, 재건책임이라는 세 가지로 구분한다. 둘째,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 채택 문서와 이후 정립된 틀에서는 국가의 보호책임, 국제사회의 지원책임, 국제사회의 적시적 대응책임이라는 세 기둥으로 설명한다. "경고, 보호, 통합"은 이 두 분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호책임의 정식 분류가 아니다.
2번: O. 보호책임은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 결과문서에서 채택되었고,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재확인되었다. 따라서 2005년 채택 후 안보리 차원에서 재확인되었다는 설명은 맞다.
3번: O. 보호책임은 국가가 주민 보호에 명백히 실패하고 평화적 수단이 불충분할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집단행동 가능성을 포함한다. 따라서 필요할 때 무력 사용을 수반한 개입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취지의 설명은 맞다. 다만 이는 일방적 개입이 아니라 유엔 헌장에 따른 집단행동이라는 제한이 붙는다.
4번: O. 보호책임의 출발점은 각 국가가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도범죄로부터 자국 주민을 보호할 1차적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이 선지는 보호책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적절히 서술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1번은 보호책임의 분류 체계를 비슷한 단어로 바꿔 놓은 함정이다. 수험생이 "보호"라는 단어에만 끌리면 전체 체계가 틀렸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3번은 무력 개입 가능성을 너무 넓게 읽으면 불안해질 수 있지만, 유엔 안보리 중심의 집단행동이라는 조건을 붙이면 맞는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호책임 문제는 먼저 대상 범죄가 집단학살·전쟁범죄·인종청소·반인도범죄의 네 가지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책임의 순서를 국가의 1차 책임 → 국제사회의 지원 → 안보리 중심의 집단행동 가능성으로 대조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R2P는 네 범죄 보호와 세 단계 책임이 핵심이며, "경고·통합"은 정식 분류가 아니다.

NoteBase

문 15. 북한 핵 개발과 관련한 주요 사건을 시기가 이른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9·19 공동성명
(나) 제네바 합의 체결
(다) 북한의 1차 핵실험
(라) 제1차 6자회담 시작

① (가) → (나) → (라) → (다)
② (나) → (가) → (다) → (라)
③ (나) → (라) → (가) → (다)
④ (다) → (가) → (나) → (라)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북한 핵 개발 관련 주요 사건의 연대순 흐름을 정확히 배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나) 제네바 합의 체결 - 1994년 북미 간 합의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 틀을 마련한 사건이다.
2. (라) 제1차 6자회담 시작 - 2003년 북핵 문제를 다자협상 틀에서 다루기 시작한 사건이다.
3. (가) 9·19 공동성명 - 2005년 6자회담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합의한 사건이다.
4. (다) 북한의 1차 핵실험 - 2006년 북한이 첫 핵실험을 강행한 사건이다.

왜 이 순서: 1994년 제네바 합의가 가장 이르고, 이후 북핵 위기가 재점화된 뒤 2003년 6자회담이 시작되며, 그 협상 성과가 2005년 9·19 공동성명이고, 협상 교착 뒤 2006년 1차 핵실험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가) 9·19 공동성명은 2005년이고 (나) 제네바 합의는 1994년이므로 맨 앞 두 사건의 선후가 바뀌었다. 틀린 표현은 '(가)→(나)'이고, 올바르게는 '(나)→(라)→(가)→(다)'이다.
2번: X. (나)와 (가)의 상대적 위치는 맞지만, (다) 북한의 1차 핵실험은 2006년 사건이므로 2003년의 (라) 제1차 6자회담 시작보다 앞설 수 없다. 틀린 표현은 '(다)→(라)'이고, 올바르게는 '(라)→(가)→(다)'이다.
3번: O. 제네바 합의 1994년, 제1차 6자회담 2003년, 9·19 공동성명 2005년, 1차 핵실험 2006년의 순서이므로 정확하다.
4번: X. (다) 북한의 1차 핵실험은 제시된 사건들 중 가장 늦은 2006년 사건인데 이를 맨 앞에 둔 것이 틀렸다. 틀린 표현은 '(다)→(가)→(나)→(라)'이고, 올바르게는 '(나)→(라)→(가)→(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9·19 공동성명과 제1차 6자회담을 같은 협상 국면으로 묶어 두 사건의 선후를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6자회담 시작이 먼저이고 9·19 공동성명은 그 회담 과정의 합의 결과라는 점을 잡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북핵 사건 순서 문제는 먼저 연도를 붙여 판단하면 된다. 제네바 합의 1994년, 1차 6자회담 2003년, 9·19 공동성명 2005년, 1차 핵실험 2006년처럼 연도 기준으로 배열하면 정답이 바로 걸러진다.

암기 포인트

북핵 순서는 제네바 합의 후 6자회담, 6자회담 후 9·19 공동성명, 그 뒤 1차 핵실험이다.

NoteBase

문 16. 브레튼우즈 체제를 구성하는 국제기구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제노동기구(ILO)
ㄴ. 국제통화기금(IMF)
ㄷ.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ㄹ.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브레튼우즈 체제를 구성한 핵심 국제경제기구와 유엔 계열의 다른 국제기구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브레튼우즈 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통화와 전후 복구·개발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경제질서이다. IMF는 국제통화질서와 환율 안정을 담당하는 기구이고, IBRD는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 전후 복구와 개발금융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ILO는 노동 문제를 다루는 국제노동기구로 브레튼우즈 체제의 구성기구가 아니며, UNCTAD는 개발도상국의 무역·개발 문제를 다루는 유엔무역개발회의로 역시 브레튼우즈 체제의 핵심 기구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1번 X: ㄱ과 ㄷ의 조합이다. ㄷ의 IBRD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핵심 기구가 맞지만, ㄱ의 ILO는 노동 기준과 사회정의를 다루는 유엔 전문기구이다. 틀린 부분은 ILO를 브레튼우즈 기구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ILO를 제외하고 IBRD만 포함된다.
2번 X: ㄱ과 ㄹ의 조합이다. ILO와 UNCTAD 모두 브레튼우즈 체제의 구성기구가 아니다. 틀린 부분은 두 기구를 모두 브레튼우즈 체제에 넣은 점이다. 올바르게는 ILO와 UNCTAD는 제외된다.
3번 O: ㄴ과 ㄷ의 조합이다. IMF는 국제통화기금으로 브레튼우즈 체제의 통화축을 담당하고, IBRD는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 브레튼우즈 체제의 개발금융축을 담당한다. 두 기구 모두 브레튼우즈 회의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옳다.
4번 X: ㄴ과 ㄹ의 조합이다. ㄴ의 IMF는 맞지만 ㄹ의 UNCTAD는 1964년 유엔 체제 아래 출범한 무역·개발 논의기구이다. 틀린 부분은 UNCTAD를 브레튼우즈 구성기구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IMF는 포함되지만 UNCTAD는 제외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ILO, UNCTAD처럼 국제경제나 국제협력과 관련된 이름이 나오면 브레튼우즈 기구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브레튼우즈 체제는 국제통화와 부흥·개발금융을 위한 IMF와 IBRD가 중심이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구의 설립 목적이 국제통화 안정과 전후 복구·개발금융인지 먼저 본다. 통화 안정이면 IMF, 부흥·개발금융이면 IBRD로 연결하고, 노동이나 일반 무역·개발 협의기구이면 브레튼우즈 핵심 기구에서 우선 제외하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브레튼우즈는 IMF와 IBRD의 두 축, ILO와 UNCTAD는 유엔 계열의 별도 기구이다.

NoteBase

문 17. 1995년 피어론(J. Fearon)이 협상모델(bargaining model)을 통해 설명한 전쟁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전쟁 쟁점의 불가분성 문제
② 전쟁 당사국의 약속 이행의 문제
③ 전쟁 당사국 사이의 정보 불일치 문제
④ 전쟁 당사국 국내 이익집단의 영향력 문제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피어론의 협상모델이 제시한 전쟁의 합리주의적 원인 세 가지, 즉 쟁점의 불가분성, 약속 이행의 문제, 정보 불일치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피어론은 전쟁이 항상 비합리적 충동의 산물이 아니라 협상 실패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표 원인은 전쟁 쟁점의 불가분성, 미래의 약속을 믿기 어려운 약속 이행의 문제, 상대의 능력과 의도를 둘러싼 정보 불일치와 허위표시 유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전쟁 쟁점이 분할되지 않거나 타협 가능한 방식으로 나누기 어려우면 협상 타결이 어렵다. 피어론은 이를 전쟁의 한 원인으로 보았다.
② O. 협상으로 합의해도 상대가 나중에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기 어려우면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협상모델의 핵심인 약속 이행의 문제이다.
③ O. 상대의 군사력, 결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이를 과장하거나 숨길 유인이 있으면 협상이 실패할 수 있다. 이는 정보 불일치와 허위표시 유인의 문제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전쟁 당사국 국내 이익집단의 영향력 문제'이다. 국내 이익집단이나 국내정치 변수는 다른 전쟁 설명에서는 중요할 수 있지만, 피어론의 1995년 협상모델이 제시한 세 가지 직접 원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쟁점의 불가분성, 약속 이행의 문제, 정보 불일치와 허위표시 유인'이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전쟁의 원인을 넓게 공부한 수험생에게 매우 그럴듯하게 보이는 선지이다. 그러나 이 문항은 전쟁 일반론이 아니라 피어론의 협상모델이 특정한 협상 실패의 원인을 묻는다. 국내 이익집단의 영향력은 별도의 국내정치 설명일 수 있어도 피어론의 대표적인 세 요인 목록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피어론의 협상모델이 나오면 먼저 세 가지를 떠올리면 된다. 쟁점을 나눌 수 없는가, 약속을 믿을 수 없는가,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는가를 본다. 이 셋이 아니고 국내정치나 심리, 지도자 성향 같은 설명이 나오면 우선 배제 대상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피어론 협상모델 = 불가분성, 약속 이행, 정보 불일치이다.

NoteBase

문 18. 전쟁의 명칭과 해당 전쟁 후 수립된 국제체제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제2차 세계대전 - 얄타 체제

② 나폴레옹 전쟁 - 비엔나 체제

③ 30년 전쟁 - 베스트팔렌 체제

④ 제1차 세계대전 - 바이마르 체제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주요 전쟁과 그 전쟁 뒤 형성된 국제체제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30년 전쟁 뒤에는 베스트팔렌 체제가 성립하여 주권국가 질서가 강화되었다.
나폴레옹 전쟁 뒤에는 비엔나 체제가 성립하여 세력균형과 보수적 협조가 강조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뒤에는 베르사유 체제가 성립하여 전승국 중심의 전후질서와 국제연맹이 등장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뒤에는 얄타 체제가 성립하여 미국과 소련 중심의 양극체제가 굳어졌다.

선지별 해설

1번: O.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질서는 미국과 소련이 주도한 양극구조로 재편되었고, 이를 얄타 체제라고 부른다.
2번: O.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는 1815년 빈 회의를 중심으로 비엔나 체제가 성립하였다. 핵심은 열강 협조와 세력균형이다.
3번: O. 30년 전쟁을 마무리한 베스트팔렌 조약은 근대적 주권국가 체제의 출발점으로 이해되며, 이를 베스트팔렌 체제라고 한다.
4번: X. 틀린 부분은 '제1차 세계대전 - 바이마르 체제'이다. 제1차 세계대전 뒤의 국제체제는 베르사유 체제라고 보는 것이 맞고, 바이마르 체제는 독일 국내의 바이마르공화국 질서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오답 포인트

4번은 '바이마르'가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등장한 용어라는 점 때문에 국제체제 명칭처럼 보이게 만든 함정이다. 그러나 바이마르는 독일의 국내 정치체제를 가리키고, 국제정치의 전후 질서는 베르사유 체제로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쟁 이름을 보면 먼저 그 전쟁을 종결한 대표 조약이나 회의가 무엇인지 떠올리고, 그 결과 형성된 국제질서의 명칭이 국제체제인지 특정 국가의 국내체제인지를 구분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베스트팔렌은 주권국가, 비엔나는 세력균형, 베르사유는 제1차 세계대전 후, 얄타는 냉전 양극체제이다.

NoteBase

문 19.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의 도입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되었다.

②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의 창설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③ 건국 초기 해밀턴(A. Hamilton)은 미국 유치산업보호론에 기초하여 보호무역을 옹호하였다.

④ 1934년 제정된 호혜통상협정법(Reciprocal Trade Agreements Act)은 대통령에게 기존 관세의 66% 수준 이내로 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미국 대외경제정책의 흐름을 보호무역 강화, 상호주의적 자유화 전환, 전후 무역기구 구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대공황기 보호무역 강화의 상징이다. 호혜통상협정법은 고율관세 중심 정책에서 상호주의적 관세 조정으로 방향을 돌린 법이다. 국제무역기구는 전후 자유무역 질서를 제도화하려던 구상이지만 미국 의회의 비준 실패로 출범하지 못하였다. 해밀턴은 유치산업보호론으로 초기 미국 산업 보호를 정당화하였다.

선지별 해설

1번: O.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1930년 미국이 수입품 관세를 대폭 올린 법으로, 대공황기 보호무역을 강화한 대표 사례이다.
2번: O. 미국은 전후 브레턴우즈 체제와 함께 국제무역기구 창설을 추진하였지만, 하바나 헌장을 미국 의회가 비준하지 않아 국제무역기구는 실제로 출범하지 못하였다.
3번: O. 해밀턴은 「제조업에 관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후발 산업을 육성하려면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는 유치산업보호론의 대표적 논리이다.
4번: X. 틀린 표현은 "기존 관세의 66% 수준 이내로"이다. 1934년 호혜통상협정법은 대통령에게 기존 관세를 최대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협상 권한을 부여하였다. 올바르게는 "기존 관세를 최대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이다.

오답 포인트

1930년 스무트-홀리와 1934년 호혜통상협정법은 방향이 반대인데, 둘 다 관세정책이라는 점만 보고 묶어 버리면 헷갈린다. 특히 4번은 법 이름은 맞지만 수치인 66%를 끼워 넣어 틀리게 만든 선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미국 통상정책 문제는 연도와 정책 방향을 함께 묶어 판단한다. 1930년 스무트-홀리는 보호무역 강화, 1934년 호혜통상협정법은 상호주의적 관세 조정, 전후 국제무역기구는 창설 시도 실패로 정리하면 선지의 진위를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스무트-홀리=보호무역 강화, RTAA=1934년 50% 관세 조정, ITO=창설 실패, 해밀턴=유치산업 보호이다.

NoteBase

문 20. 한국의 역대 정부와 그 정부에서 일어난 남북 관계 사건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박정희 정부 - 7 · 4 남북공동성명 발표

② 김영삼 정부 - 남북 유엔 동시 가입

③ 김대중 정부 -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④ 노태우 정부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남북관계의 주요 사건을 발생 시기와 당시 한국 정부에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박정희 정부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정부이다.
노태우 정부는 19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 이루어진 정부이다.
김영삼 정부는 1991년 사건의 주체가 아니며, 남북 유엔 동시 가입 정부로 연결하면 틀린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정부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7·4 남북공동성명은 1972년 7월 4일 발표되었고 당시 정부는 박정희 정부이므로 연결이 옳다.
2번 X: 틀린 부분은 '김영삼 정부'이다.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은 1991년에 이루어졌으므로 실제로는 노태우 정부와 연결된다.
3번 O: 2000년 6월 김대중 정부 시기에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으므로 연결이 옳다.
4번 O: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인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노태우 정부 시기에 채택되었으므로 연결이 옳다.

오답 포인트

1991년의 남북 유엔 동시 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모두 노태우 정부 시기 사건으로 묶지 못하면 2번과 4번 사이에서 흔들리기 쉽다. 또한 발문이 '옳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놓치면 맞는 선지를 고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남북관계 사건 연결 문제는 먼저 연도를 확정한 뒤 그 연도가 어느 정부 시기인지 대입하면 빠르게 풀린다.
1972년은 박정희 정부, 1991년은 노태우 정부, 2000년은 김대중 정부로 잡으면 된다.

암기 포인트

72 박정희 7·4, 91 노태우 유엔·기본합의서, 2000 김대중 정상회담으로 묶어 기억한다.

NoteBase

문 21. 주요 국제 인권 협약 발효가 이른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아동권리협약
(나) 장애인권리협약
(다) 인종차별철폐국제협약
(라)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① (가) → (다) → (나) → (라)
② (가) → (나) → (라) → (다)
③ (다) → (라) → (가) → (나)
④ (라) → (다) → (가) → (나)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주요 국제 인권 협약의 발효 시점을 연대순으로 배열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올바른 순서

1. (다) 인종차별철폐국제협약 - 1969년 1월 4일 발효
2. (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1976년 3월 23일 발효
3. (가) 아동권리협약 - 1990년 9월 2일 발효
4. (나) 장애인권리협약 - 2008년 5월 3일 발효

왜 이 순서: 가장 이른 것은 인종차별철폐국제협약이고, 그 다음이 ICCPR, 그 뒤가 아동권리협약, 마지막이 장애인권리협약이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가)를 가장 앞에 둔 점이다. 아동권리협약은 1990년 발효이므로 1969년 발효한 인종차별철폐국제협약과 1976년 발효한 ICCPR보다 뒤에 와야 한다. 올바르게는 (다) → (라) → (가) → (나)이다.
2번: X. 틀린 부분은 (나)를 (라)보다 앞에 둔 점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은 2008년 발효로 네 협약 중 가장 늦으므로 중간이 아니라 마지막에 와야 한다. 올바르게는 (다) → (라) → (가) → (나)이다.
3번: O. 인종차별철폐국제협약 1969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76년, 아동권리협약 1990년, 장애인권리협약 2008년 순서이므로 맞다.
4번: X. 틀린 부분은 (라)를 (다)보다 앞에 둔 점이다. ICCPR은 1976년 발효이고 인종차별철폐국제협약은 1969년 발효이므로 (다)가 먼저이다. 올바르게는 (다) → (라) → (가) → (나)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채택 연도와 발효 연도를 혼동하면 틀리기 쉽다. 특히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채택 후 1990년 발효이고,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채택 후 2008년 발효이므로 협약명만 보고 최신 순서를 섞으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협약 순서형 문제는 협약명을 보자마자 채택 시점이 아니라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오래된 협약과 가장 최근 협약을 먼저 고정한 뒤 가운데 둘을 배치하면 빠르게 풀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인종차별 1969 → 자유권규약 1976 → 아동 1990 → 장애인 2008 순서이다.

NoteBase

문 22.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국은 지부티에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다.

② 2020년 에스와티니는 중국의 일대일로(BRI)에 참여하였다.

③ 2018년 개최된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에는 53개의 아프리카 국가가 참석하였다.

④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은 2000년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후 3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중국-아프리카 관계의 기본 사실관계, 즉 지부티 군사거점, 에스와티니의 대만 수교, FOCAC의 참가 범위와 개최 주기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FOCAC는 중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참여하는 중국-아프리카 협력체이고, 에스와티니는 대만과 수교를 유지해 온 예외 국가이다. 중국의 대아프리카 군사 존재는 지부티의 PLA 지원기지로 상징되며, FOCAC는 2000년 베이징에서 시작되어 3년 주기의 장관급 회의를 기본 틀로 운영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중국은 지부티에 PLA 지원기지를 두고 있다. 이는 중국의 첫 해외 군사거점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지부티에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다는 진술은 맞다.

② X
틀린 부분은 "2020년 에스와티니는 중국의 일대일로(BRI)에 참여하였다"는 표현이다. 에스와티니는 아프리카에서 대만과 수교를 유지해 온 예외 국가이므로 중국과의 공식 협력체계인 FOCAC나 BRI 참가국으로 보기 어렵다. 올바르게는 "에스와티니는 2020년에도 대만과 수교를 유지한 국가로, 중국의 일대일로 참여국으로 보기 어렵다"이다.

③ O
2018년 베이징 FOCAC 정상회의에는 중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53개국이 참석하였다. 2018년 당시 UN이 인정한 아프리카 국가는 54개국인데, 그중 대만과 수교를 유지한 에스와티니 1개국만 중국과 수교하지 않아 빠졌으므로 54개국에서 1개국을 뺀 53개국이 참석한 것이다. 따라서 53개국 참석이라는 설명은 맞다.

④ O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은 2000년 베이징에서 처음 개최되었고 장관급 회의를 3년마다 여는 틀로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최초 개최지와 기본 주기를 함께 묶은 이 진술은 맞다.

오답 포인트

에스와티니를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같은 범주로 묶으면 ②에 속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아프리카 국가 일반"이라는 인상 때문에 에스와티니의 대만 수교라는 예외를 놓치게 만드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국-아프리카 관계 문제에서는 먼저 예외국 존재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협력기구의 참가 범위와 주기를 본다. 에스와티니처럼 중국과 수교하지 않은 예외가 보이면 FOCAC, BRI 관련 선지는 우선 의심하는 방식이 유효하다.

암기 포인트

지부티는 중국 해외 군사거점, 에스와티니는 대만 수교 예외, FOCAC는 2000년 시작·53개국·3년 주기이다.

NoteBase

문 2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대외 정책은?

미국의 소련 팽창에 대한 대응 전략의 하나로 1947년에 발표되어 서유럽 경제 재건에 필수적인 대규모 재정적 지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를 계기로 서유럽 국가 간 경제교류가 활성화되었다.

① 동방정책
② 마셜플랜
③ 글라스노스트
④ 브레즈네프 독트린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냉전기 주요 대외정책의 주체, 시기, 목적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마샬플랜은 1947년에 발표된 미국의 유럽 경제부흥 지원 정책으로, 서유럽 재건과 공산주의 확산 억제를 함께 노린다.
동방정책은 서독이 동독과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한 정책이다.
글라스노스트는 고르바초프 시기 소련의 개방 정책이다.
브레즈네프 독트린은 사회주의권 이탈을 막기 위해 소련의 개입을 정당화한 대외노선이다.

선지별 해설

1번(X): 동방정책은 서독의 빌리 브란트 정부가 추진한 동유럽 관계 개선 정책이다. 지문의 핵심인 "1947년 발표", "미국", "서유럽 경제 재건 지원"과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정책 주체와 내용이다. 올바르게는 서독의 대동방 관계 개선 정책이다.
2번(O): 마샬플랜은 미국이 1947년에 제시한 유럽부흥계획으로, 서유럽에 대규모 경제원조를 제공해 전후 복구와 공산주의 팽창 억제를 도모하였다. 지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3번(X): 글라스노스트는 1980년대 후반 고르바초프가 추진한 소련 내부의 정치·사회적 개방 정책이다. 서유럽 경제 재건을 위한 미국의 대외원조 정책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소련 개혁기의 개방 노선이다.
4번(X): 브레즈네프 독트린은 사회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진영에서 이탈하려 할 때 소련의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한 원칙이다. 미국의 경제원조 정책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올바르게는 소련의 대사회주의권 통제 논리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정책 이름만 보고 고르면 시기와 주체가 섞여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모두 냉전 관련 용어이지만, 미국의 대외원조인지, 서독의 화해정책인지, 소련의 개혁정책인지, 소련의 개입독트린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냉전사 정책 문제는 먼저 주체를 미국·서독·소련으로 나누고, 다음으로 목적을
경제원조·관계개선·개방개혁·군사개입 정당화 중 무엇인지 확인하면 정답을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마샬플랜은 미국의 서유럽 경제원조, 동방정책은 서독의 화해, 글라스노스트는 소련의 개방, 브레즈네프 독트린은 소련의 개입 정당화이다.

NoteBase

문 24. 핵무기 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98년 인도는 핵실험 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였다.

② 1972년 미국과 소련은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에 서명하였다.

③ 1963년 대기권·수중·우주 공간에서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부분핵실험금지조약(PTBT)이 체결되었다.

④ 199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은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핵비확산과 핵군비통제 관련 주요 조약의 성격과 체결 경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NPT는 핵보유국의 추가 확산을 막는 비확산조약이며 인도는 조약의 차별성을 이유로 애초에 가입하지 않았다. PTBT는 대기권·수중·우주 공간 핵실험만 금지하는 부분 핵실험금지조약이다. CTBT는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 조약이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SALT I는 1972년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전략무기 제한 합의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NPT를 탈퇴하였다"이다. 인도는 1998년 핵실험 이후 NPT를 탈퇴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NPT 비가입국이었다.
② O. 1972년 미국과 소련은 SALT I에 서명하였다. 이는 전략무기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최초의 본격적 합의이다.
③ O. 1963년 체결된 PTBT는 대기권·수중·우주 공간에서의 핵실험을 금지하였다. 지하 핵실험은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 핵실험금지조약이라고 부른다.
④ O. 1996년 유엔 총회에서 CTBT가 채택되었고 내용상 모든 핵실험을 금지한다. 다만 발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오답 포인트

인도의 1998년 핵실험을 보고 NPT 탈퇴로 연결하면 오답이 된다.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은 탈퇴와 비가입의 구분, PTBT의 부분 금지와 CTBT의 포괄 금지, 그리고 채택과 발효의 구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핵 관련 조약 문제는 먼저 비확산조약인지, 실험금지조약인지, 전략무기 제한 합의인지를 구분한 뒤 가입·탈퇴, 부분 금지·전면 금지, 채택·발효를 나누어 판단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인도는 NPT 탈퇴국이 아니라 비가입국, PTBT는 부분 금지, CTBT는 전면 금지이지만 미발효, SALT I는 1972년이다.

NoteBase

문 25. 공공외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상대 국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외교활동이다.

② 문화, 예술, 지식 등과 같은 소프트 파워를 사용하는 외교활동이다.

③ 공공외교 증진을 위해 트루먼 정부는 1950년 미국공보처(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를 설립하였다.

④ 냉전기에는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와 평판을 위한 홍보 등을 통해 체제의 우월을 선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공외교의 대상, 수단, 역사적 전개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공외교는 정부가 타국 정부만이 아니라 타국 국민과 여론을 상대로 자국에 대한 이해와 선호를 형성하려는 외교활동이다.
소프트 파워는 강제가 아니라 문화, 가치, 지식, 정책의 매력으로 상대를 끌어들이는 힘이며, 공공외교는 이를 활용하는 대표적 방식이다.
냉전기 공공외교는 오늘날의 상호소통형 공공외교보다 선전, 홍보, 국제방송을 통해 자국 이미지와 체제 우월성을 알리는 성격이 더 강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국가가 상대 국가의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과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이라는 점이 공공외교의 핵심이다. 외교 대상을 타국 국민까지 넓힌 설명이므로 옳다.

② O
공공외교는 문화, 예술, 지식과 같은 소프트 파워 자원을 활용해 호감과 신뢰를 형성한다. 강압보다 매력과 설득을 활용한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③ X
틀린 부분은 \"트루먼 정부는 1950년 미국공보처를 설립하였다\"는 표현이다. 미국공보처(USIA)는 트루먼 정부가 아니라 아이젠하워 정부 시기인 1953년에 설치되었다. 올바르게는 \"공공외교 증진을 위해 아이젠하워 정부는 1953년 미국공보처를 설립하였다\"이다.

④ O
냉전기 공공외교는 상호이해 증진만이 아니라 이념 경쟁의 수단이라는 성격도 강했다. 긍정적 국가 이미지와 평판을 만들고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방식이 실제로 널리 활용되었으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③은 공공외교의 일반 특징이 아니라 기관 설립 연도와 행정부를 뒤바꿔 놓은 선지이다. 수험생이 공공외교의 큰 흐름만 알고 연표를 흐리게 기억하면 트루먼과 아이젠하워, 1950년과 1953년을 쉽게 혼동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공외교 문제는 먼저 대상이 타국 정부인지 타국 국민인지부터 구분하고, 다음으로 수단이 하드 파워인지 소프트 파워인지 확인하면 된다. 역사 선지가 나오면 기관명, 행정부, 연도를 한 묶음으로 점검하면 함정을 줄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공공외교는 타국 국민 대상, 수단은 소프트 파워, USIA는 1953년 아이젠하워이다.

NoteBase